



##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일본정부의 경제대책과 시사점

이 형 근 세계지역연구센터 일본팀 전문연구원 (hklee@kiep.go.kr, Tel: 3460-1069)

1. 도입
2. 경제대책의 추진 배경과 주요 내용
  - 가. 추진 배경 - 최근 일본경제 여건
  - 나. 경제대책의 주요 내용
3. 평가 및 시사점

### 주요 내용

- ▶ 2008년 9월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의 동시 불황이 전개되고, 그 여파로 일본 또한 경기침체에 직면하게 되자 일본정부는 생활대책(08년 10월), 생활방어 긴급대책(08년 12월), 경제위기대책(09년 4월) 등 경제위기 대응책을 잇따라 발표함.
  - 세 차례 경제대책의 총사업비와 재정지출액 규모는 각각 120.7조 엔, 24.4조 엔이며, 개별 대책 차원에서도 역대 최대 규모에 달함.
  - 중점 대응분야는 고용불안 및 신용경색 해소이며, 총사업비의 대부분은 기업의 신용경색 해소 및 금융·자본시장 안정화를 위한 금융대책에 소요됨.
  - 각 경제대책에는 환경·에너지 등의 미래 성장동력 분야에 대한 감세 및 재정지원 조치를 포함시켜 당면한 경제위기 에 대응하고 경제회복 이후 세계시장의 선점을 모색함.
  - 단일 경제대책으로서 역대 최대 규모였던 금년 4월 경제 위기대책(56.8조 엔)의 금년도 경제효과에 대해 일본 정부 (내각부)와 민간경제연구소는 각각 1.9%포인트 및 1%포인트의 GDP성장률 상승을 전망함.
- ▶ 수출급감이라는 대외요인에서 비롯된 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내수기반의 강화가 중요한 정책과제임.
  - 일본이 세 차례 경제대책 모두에 포함시켰던 환경·에너지 등의 미래 성장동력 분야는 내수기반 강화뿐만 아니라 위기 이후 세계시장 선점을 의식한 것이며, 우리나라 역시 이러한 정책방안을 다양하게 발굴할 필요가 있음.
- ▶ 수출촉진을 위해 다자간 및 양자간 무역자유화의 지속 추진과 정부 유관기관의 국별·지역별 지역연구의 강화가 필요함.
  - 보호무역주의 예방 및 FTA의 지속 추진으로 기업의 수출 여건을 안정시키고, 국책기관의 국별·지역별 지역연구 강화로 기업의 수출시장 다변화 및 차별화된 마케팅 전략을 지원함.
- ▶ 재정건전성이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함.
  - 이번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 차원에서 추진된 한시적 지원 사업이 더 이상 연장되지 않도록 하고, 또한 세출구조조정, 복지전달체계 개선 등을 통해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 하는 노력이 긴요함.

# 1. 도입

■ 2008년 하반기 미국발 금융위기가 전세계의 실물경제로 전이되면서 주요국의 경제상황이 매우 악화됨.

- 글로벌 경제위기에 따라 G3(미국, 일본, EU) 경제가 작년 4/4분기와 금년 1/4분기에 최악의 상황에 직면하고 있으며, OECD와 IMF는 미·일·EU 경제가 2009년에 침체국면을 경험할 것으로 전망
- 특히 일본경제는 작년 4/4분기 -3.6%(연율환산 -13.5%) 성장에 이어 금년 1/4분기 -3.8%(동 -14.2%)를 기록하면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악의 마이너스 성장세를 시현

표 1. 주요국 실질GDP성장률 추이 및 전망

(단위: 전기대비 %)

국가	2008			2009	2009		2010	
	2Q	3Q	4Q	1Q	OECD	IMF	OECD	IMF
미국	0.7	-0.1	-1.6	-1.6	-4.0	-2.8	0.0	0.0
일본	-0.6	-0.7	-3.6	-3.8	-6.6	-6.2	-0.5	0.5
EU	-0.1	-0.3	-1.5	-2.5	-4.1	-4.2	-0.3	-0.4

주: 분기별 수치는 각국 정부에서 발표한 것으로 전기대비임.  
 자료: 각국 정부 홈페이지, OECD(09.3), IMF(09.4)

■ 일본정부는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현재까지 세 차례에 걸쳐 대규모 경제대책을 발표했는데, 특히 지난 4월 10일에는 역대 최대 규모의 경제위기대책을 마련

- 대규모 경제대책은 작년 10월과 12월, 그리고 금년 4월에 각각 발표되었으며, 그 규모가 점차 확대됨.

표 2.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일본정부의 경제대책 현황

(단위: 조 엔)

발표 시기	경제대책 명칭	총사업비	재정지출
2008.10.30	생활대책	26.9	5.0
2008.12.19	생활방어 긴급대책	37	4
2009.04.10	경제위기대책	56.8	15.4

자료: 일본 내각부.

■ 이하에서는 최근 일본경제의 상황을 점검하고 일본정부가 추진한 경제대책을 상세히 검토한 후, 이에 대해 평가하고 시사점을 도출함.

# 2. 경제대책의 추진 배경과 주요 내용

## 가. 추진 배경 - 최근 일본경제 여건

■ 2008년 하반기 미국발 경제위기가 전세계로 파급되면서 일본 경제는 수출 급감 → 생산 감소 → 경상이익 감소 → 신용경색 심화·고용 악화라는 총체적인 위기국면에 직면함.

- 특히 일본의 수출급감에는 엔화 강세 요인도 함께 작용했는데, 작년 하반기 엔화환율은 고점(8월 15일 110.53엔/달러) 대비 저점(12월 17일 87.24엔/달러) 기간에 21.1% 하락(엔화 강세)하여 일본제품의 수출경쟁력을 약화시킴.

그림 1. 엔/달러 환율 추이(2008.1~2009. 5)

(단위: 엔/달러)



자료: Bloomberg.

## ■ 주요 경제지표의 악화

- 일본경제는 작년 4/4분기에 이어 금년 1/4분기에도 수출, 설비투자, 민간소비가 현저히 악화되어 전후 최악의 실적을 시현했으며, 이에 따라 작년에는 회계연도(fiscal year) 기준으로 2001년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함.

표 3. 최근 일본의 주요 경제지표 추이

(단위: 전기대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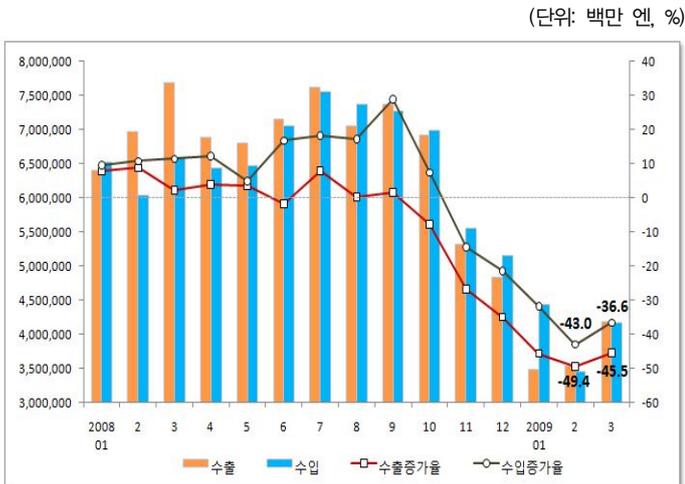
	2007 년도	2008 년도	2008년				2009
			1/4	2/4	3/4	4/4	1/4
실질GDP	1.8	-3.3	0.4	-0.6	-0.7	-3.6	-3.8
개인소비	0.9	-0.5	1.4	-1.0	0.1	-0.8	-1.1
설비투자	2.1	-9.8	1.3	-2.9	-4.2	-6.4	-8.9
공공투자	-6.3	-4.4	-5.2	-0.7	1.0	-0.1	0.1
수출	9.3	-10.2	2.4	-0.8	1.0	-14.7	-26.0
수입	1.7	-3.5	2.4	-4.2	1.5	3.1	-15.0

자료: 일본 내각부.

■ 수출 급감

- 수출은 작년 4/4분기 -14.7%에 이어 금년 1/4분기 -26.0%로 급감함. 수출증가율(전년동월대비)은 작년 10월부터 마이너스로 전환됐으며, 금년 2월에는 사상 최대 폭의 하락세(-49.4%)를 기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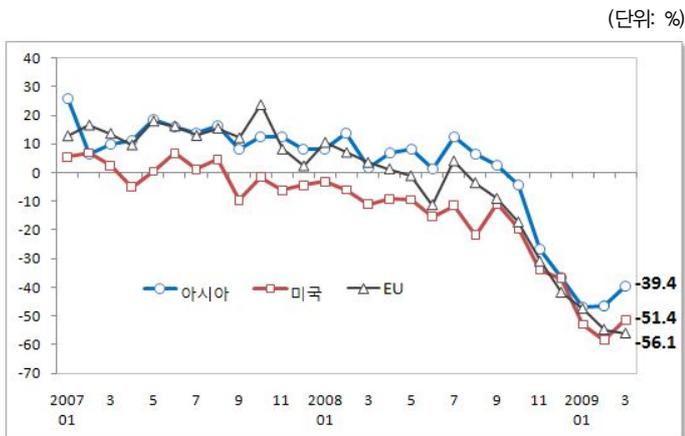
그림 2. 일본의 수출입 추이



주: 수출 및 수입 증가율은 전년동월대비임.  
자료: 일본 재무성(무역통계).

- 지역별: 대미 수출은 이미 2007년 9월부터 전년동월대비 마이너스 성장세로 전환되었으나 여타 지역에서의 수출이 호조세를 보이면서 전반적으로 수출증가가 유지되었음. 그러나 작년 8월부터 대EU 수출이, 그리고 10월부터는 대아시아 수출이 마이너스를 기록하면서 총수출이 급감함.

그림 3. 일본의 지역별 수출증가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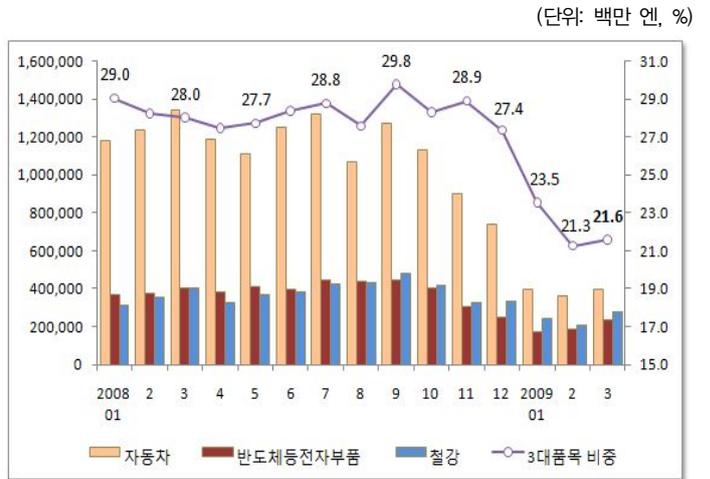


주: 증가율은 전년동월대비임.  
자료: 일본 재무성(무역통계).

- 품목별: 3대 주력 수출품목인 자동차, 철강, 반도체등전자부품의 수출감소가 작년 12월부터 현저함. 특히 자동차 수출은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금년 2월에는

전년동월대비로 -70.9%를 기록하기도 함. 이에 따라 총수출에서 차지하는 이들 품목의 비중이 20%대 초반으로 급락함.

그림 4. 일본의 3대 품목별 수출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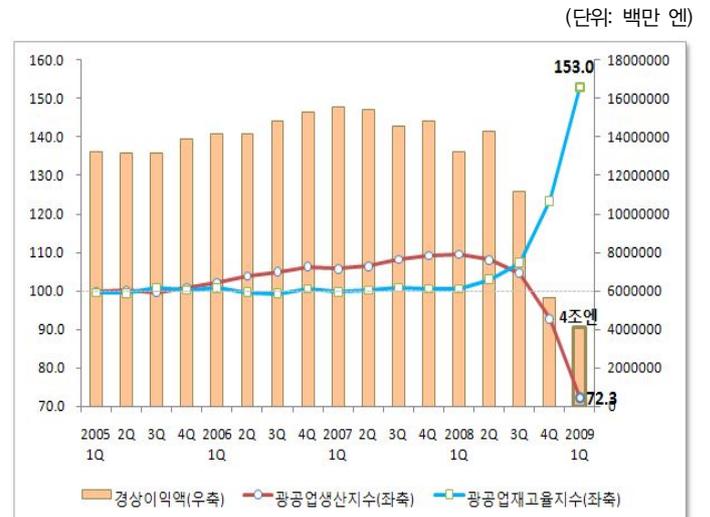


자료: 일본 재무성(무역통계).

■ 생산 감소, 재고 누적, 경상이익 감소 현저

- 수출 급감에 따라 일본기업의 생산 감소 및 재고 누적이 발생하면서 경상이익(영업이익+영업외수익-영업외비용)도 현저히 감소
  - 작년 1/4분기 광공업 생산 및 재고율 지수는 각각 109.5, 100.6이었으나 금년 1/4분기에는 72.3 및 153.0로 급격히 악화
  - 경상이익도 작년 1/4분기 13.2조 엔에서 4/4분기 4조 엔으로 급감

그림 5. 광공업 생산·재고율지수 및 경상이익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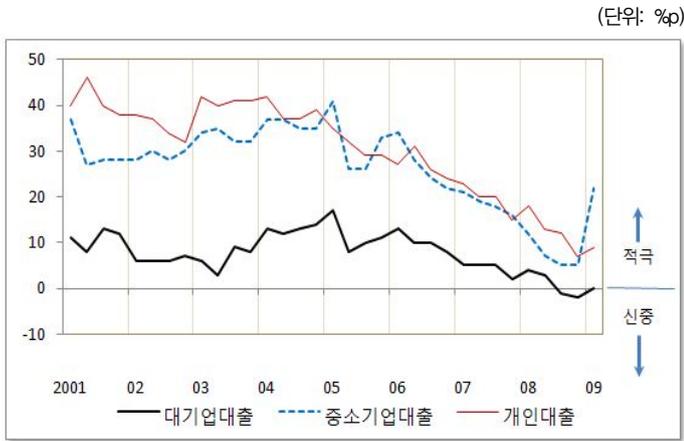


주: 광공업 생산 및 재고율 지수는 2005년 = 100.0을 기준으로 함.  
자료: 일본 경제산업성(광공업지수); 재무성(법인기업통계조사).

■ 신용경색 심화 및 고용 악화

- 일본 금융기관의 기업 및 개인에 대한 융자태도는 작년에 지속적으로 악화되었으며, 금년 들어 소폭 개선됨.

그림 6. 일본금융기관의 융자태도(DI 지수)



주: 50개 금융기관 대상, 분기별 자료.  
 자료: 일본은행(주요 은행 대출동향 앙케이트조사, 09.4.22).

- 일본 중소기업이 체감하는 자금조달 여건은 2007년 4/4분기부터 마이너스를 기록한 이래 금년 1/4분기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악화됨.
- 또한 중소기업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는 여건이 장·단기 자금 모두에서 작년 하반기부터 악화로 전환됨.

그림 7. 중소기업 자금조달 상황(DI 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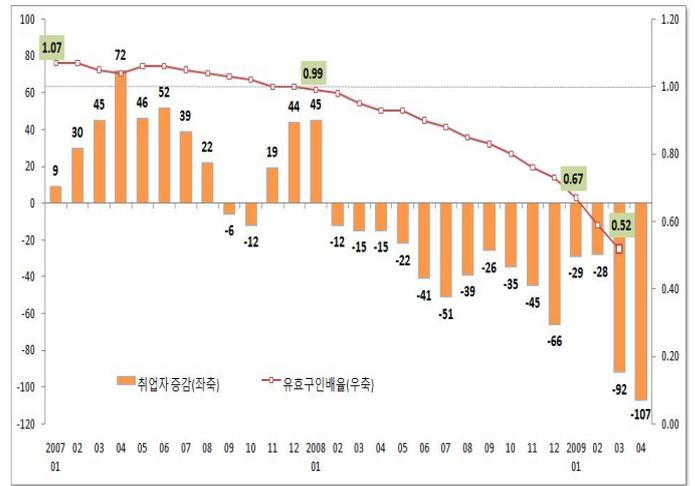
주: 5,931개 중소기업 대상, 분기별 자료.  
 자료: 일본정책금융공고(전국 중소기업 동향조사 결과, 09.4.22).

- 취업자 수는 작년 2월부터 전년동월대비 감소세로 전환됐으며, 구직자 대비 구인율을 나타내는 유효구인배율 역시 작년년부터 지속적으로 악화됨.
- 취업자의 경우 금년 4월에 가장 많이 감소하여 전년동월대비 107만 명이 감소

- 유효구인배율은 금년 3월 현재 0.52배로, 구직자의 약 절반이 취업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8. 최근 취업자 증감 및 유효구인배율 추이

(단위: 만 명, 배)



주: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증감(만 명)임.  
 자료: 일본 총무성(노동력조사).

나. 경제대책의 주요 내용

■ 일본정부의 경제위기 인식

- 일본의 아소 정부는 2008년 9월 미국발 금융위기가 세계경제의 동시 불황으로 확산되고, 그 여파로 일본 또한 경기하강 국면이 장기화(회복까지 약 3년 소요)될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의 필요성을 인식함. 세 차례의 대책수립 시 국내의 경제정세에 대한 일본정부의 기본인식은 다음과 같음.

○ 생활대책(2008.10.30)

- ▶ 해외수요의 위축뿐만 아니라 국내수요도 정체됨에 따라 경기하강 국면이 장기화·심각화될 우려가 커짐.
- ▶ 경제적 약자인 가계, 중소기업, 지방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가 시급한 과제로 대두
- ▶ 내수확대와 신성장동력을 통한 내수주도형 경제성장으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주택투자 활성화, 저탄소사회 구축을 향한 설비투자 촉진, 국내금융자산을 활용한 소비확대가 중요

○ 생활방어 긴급대책(2008.12.19)

- ▶ 전세계의 경기후퇴 국면 하에서 일본 역시 경기하강 국면의 장기화·심각화 우려가 고조
- ▶ 특히 연말을 앞두고 고용정세의 급속한 악화와 기업의 자금조달난 기증에 대한 긴급대응책 마련이 중요 과제

- 경제위기대책(2009. 4. 10)
  - ▶ 일본경제는 단기적 위기(침체가속화 위협)와 구조적 위기(새로운 균형을 모색하는 세계경제의 대조정)라는 두 가지의 위기에 직면
  - ▶ 위기 이후 세계경제는 저탄소와 건강장수 등 공통과제에 대응하는 것이 더욱 중요
  - ▶ 3단계 경제국면을 상정
    - 침체가속화 회피를 최우선하는 국면[09년도 후반까지]: 평상시 경제원칙·정책원칙에서의 괴리도 각오하며, 중점 분야는 고용, 금융, 사회적 약자 대책임.
    - 저점·반전을 확실히 하는 국면[09년도 후반 ~ 10년도 후반]: 성장력 제고를 위한 인프라투자, 민간수요 유발 효과가 높은 대책, 수출의존 경제·산업구조의 전환축진을 위한 대책을 우선시
    - 새로운 성장궤도 국면[10년도 후반 이후]: 내수와 수출의 쌍발엔진에 의한 균형 있는 성장경제를 실현

**경제대책의 재원 성격에 대한 논란**

- 재정투융자특별회계는 국가가 채권을 발행·조달한 자금을 정부계 금융기관이나 독립행정법인 등에 대부하는 회계로서, 금리변동에 따라 이자지급이 이자수입보다 많아 손실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금리변동준비금’을 적립해 둠.
- 이 준비금이 남으면 매년 국제상환에 사용하도록 법률로서 정하고 있는데, 이를 경제대책 재원으로 사용하는 것은 결국 국제잔고의 측면에서 보면 국채의 추가발행과 다를 것이 없다고 지적(아사히신문, 08.10.22)

■ 세 차례 경제대책의 중점 분야

- 총사업비 및 재정지출 규모: 작년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세 차례에 걸쳐 수립된 경제대책의 총사업비와 재정지출액 규모는 각각 120.7조 엔, 24.4조 엔임(표 2 참고).
- 중점 대응분야: 주로 고용, 기업자금조달, 성장력 강화, 지역활성화 등의 분야에 초점이 맞추어짐.
- 생활대책(08.10.30)에서는 가계생활 안정(재정지출 2.8조 엔), 금융·경제 안정 강화(동 0.6조 엔), 지방의 저력 발휘(동 1.6조 엔)의 3대 분야임.
- 생활방어 긴급대책(08.12.19)에서는 재정투입 분야인 고용대책(1.1조 엔), 지방교부세 증액(1조엔), 경제긴급대응 예비비(1조 엔), 감세(1조 엔)와 사업비 투입 분야인 금융시장안정·자금조달대책(33조 엔)으로 구분됨.
- 경제위기대책(09.4.10)에서는 긴급대책(재정지출 4.4조 엔), 성장전략(동 6.2조 엔), 안심과 활력 실현(동 4.3조 엔), 세계개정(동 0.1조 엔)의 4대 분야임.

표 4. 각 경제대책별 일본정부의 기본인식과 자원조달

	생활대책 (08.10.30)	생활방어 긴급대책 (08.12.19)	경제위기대책 (09.4.10)
정부의 기본 인식	-세계경제의 동시 불황 전개와 그 여파로 일본 또한 경기하강 국면의 장기화 우려 -가계, 중소기업, 지방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가 긴급과제 -내수주도형 경제성장으로의 이행이 필요	-전세계의 경기후퇴 국면 하에서 일본의 경기하강 국면이 장기화심각화될 우려 고조 -연말의 고용문제 및 기업의 자금조달 확보가 가장 중요한 과제	-두 가지 위기에 직면(단기적 위기[경제위기 심화에 직면, 구조적 위기[세계경제의 대조정 불가피]) -저탄소·건강장수 등 위기 이후 공통과제에 대응이 중요 -3단계 국면을 상정
자원조달	-재정투융자특별회계	-재정투융자특별회계, 노동보험특별회계	-재정투융자특별회계, 건설국채, 적자국채, 경제긴급대응예비비 등

자료: 내각부.

- 각 대책의 자원조달

- 생활대책(08.10.30): 적자국채에 의존하지 않고, 재정투융자특별회계의 금리변동준비금 등을 활용
- 생활방어 긴급대책(08.12.19): 적자국채에 의존하지 않고, 재정투융자특별회계의 금리변동준비금 및 노동보험특별회계 등을 활용
- 경제위기대책(09.4.10): 재정투융자특별회계의 적립금, 건설국채, 적자국채, 경제긴급대응예비비 등을 활용

표 5.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일본정부의 경제대책 개요

(단위: 조 엔)

대책명	주요 내용	사업비	
		사업비	재정투입
생활대책 (08.10.30)	국민생활 안심 · 가계 긴급 지원 · 고용안전망 강화 · 생활 안심 확보	3.0 (2.0) (0.3) (0.7)	2.8 (2.0) (0.3) (0.5)
	금융·경제 안정 강화 · 금융자본시장 안정화 · 중소기업 지원 · 성장력 강화	21.9 (-) (21.8) (0.1)	0.6 (-) (0.5) (0.1)

대책명	주요 내용	사업비	재정투입
	지방 저력 발휘 · 지역활성화 대책 · 주택투자·방재강화 · 지방공공단체지원	2.0 (1.0) (0.4) (0.6)	1.6 (0.8) (0.2) (0.6)
	총액	26.9	5.0
생활방어 긴급대책 (08.12, 19)	고용 대책	1.1	1.1
	고용창출을 위한 지방교부세 증액	1.0	1.0
	경제긴급대응 예비비 신설	1.0	1.0
	세계개정(감세조치)	1.1	1.1
	생활대책 실현(10.30대책과 중복)	(6.0)	(6.0)
	금융시장·자금조달대책 · 정부자본참가규모 확대 · 보유주식취득기구 활용 · 정책금융 확충 · 주택·부동산시장 대책	33 (10) (20) (3) (0.2)	-
	총액	37	4
경제위기 대책 (09.4, 10)	긴급 대책 · 고용 대책 · 금융 대책	44.4 (2.5) (41.8)	4.9 (1.9) (3.0)
	성장전략 · 저탄소 혁명 · 건강장수·양육 · 저력 발휘·21세기형 인프라 정비	8.8 (2.2) (2.8) (3.8)	6.2 (1.6) (2.0) (2.6)
	안심과 활력의 실현 · 지역활성화 등 · 안전·안심 확보 등 · 지방공공단체 배려	5.0 (0.4) (2.2) (2.4)	4.3 (0.2) (1.7) (2.4)
	세계개정(감세조치)	0.1	0.1
	총액	56.8	15.4
	전체 합계	120.7	24.4

주: 사업비·재정투입비 수치 가운데 일부는 대략적인 값으로, 각각의 합계와 총액이 정확히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음.  
자료: 내각부.

■ 부문별 대책의 주요 내용

- 고용 대책: 경기후퇴의 영향을 크게 받는 비정규직, 중소기업과 지방기업을 중심으로 고용안전망 강화(대책 규모는 총 3.9조 엔 정도)
- 중소기업의 고용유지 지원, 재취업 지원, 이직·실직자를 위한 주택·생활 지원, 고용보험료 인하 등의 고용대책에 최우선적으로 대응

○ 비정규직 등에 대한 새로운 사회안전망(취로훈련형 생활 지원) 구축, 고용 유지, 고용기회 창출 등 긴급 고용대책의 확충·강화

표 6. 고용 대책의 주요 내용

(단위: 조 엔)

대책별	주요 내용	사업비
생활대책 (08.10)	-비정규직 고용안정 대책 강화 -중소기업 등 고용유지 지원 대책 강화 -지역에서의 고용기회 창출	0.3
생활방어 긴급 대책(08.12)	-주택·생활 대책(실직자에 대해 사원 숙소를 계속 제공하는 사업주 지원, 실직자에 대해 주택임대비를 한시적으로 보조 등) -고용유지 대책(500억), 재취업 지원 대책(0.22조), 신규취업자 내정 취소 대책(3억) -고용보험료 인하(0.6조), 고용보험수급 자격요건 완화(0.17조), 고용조정조성금 확충 -고용창출을 위한 지방교부세 증액(1.0조)	2.1
경제위기 대책(09.4)	-재취업 지원·능력개발 대책(0.7조) -고용창출 대책(0.3조) -비정규직 보호, 내정취소 대책, 외국인노동자 지원(44억) -주택·생활 지원(0.7조) 등	2.5
합 계		3.9

- 금융 대책: 금융시장 안정화 및 기업의 신용경색 해소를 위해 총 96.6조 엔 규모(총 사업비의 80%)의 대책 추진

○ 정책금융기관의 용자 확대 및 신용보증 강화를 통해 중소기업 및 중견·대기업의 신용경색 해소에 주력

○ 「금융기능강화법」 시행으로 은행에 대해 공적자금을 강제적으로 투입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은행의 금융건전성 확보

○ '은행 등 보유주식 취득기구'를 통해 은행과 기업의 보유주식 매입을 재개하고 매입한도를 확대하여 주식시장 안정 도모 (경제위기대책[09.4]에서는 사업예산과 별도로 위기상황 발생 시 주식매입 체제[50조 엔 규모] 구축)

○ 국제협력은행(JBIC)을 통해 일본기업의 해외사업 관련 자금 조달에 대해 지원 또한 일본기업 진출이 많은 아시아 개도국 지원(JBIC를 통한 무역금융 원활화·환경투자 지원, 국제협력기구[JICA]를 통한 긴급재정지원 등)

표 7. 금융 대책의 주요 내용

(단위: 조 엔)

대책별	주요 내용	사업비
생활대책 (08.10)	-중소기업 자금조달을 위해 정책금융기관의 대부 규모 확대(21조) 등 -자사주 매입규제 완화 등 금융자본시장 안정대책 추진 -일본기업의 해외사업 대부 확충, 건설업 자금조달 원활화 등	21.8
생활방어 긴급 대책(08.12)	-개정 금융기능강화법을 통해 금융시장에 이상·긴급 상황 발생 시 대응(10조) -은행 등이 보유한 주식취득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관련 기구의 활용·강화(20조) -중견·대기업 자금조달 지원을 위해 정책금융기관의 위기대응 업무 확대(3조) -국제협력은행을 통한 일본기업의 해외사업 관련 자금조달 지원, 주택·부동산 대책 등	33
경제위기 대책(09.4)	-중소기업 자금조달 지원을 위해 정책금융기관의 보증 규모 확대(16.9조) -중견·대기업 자금조달 지원을 위해 정책금융기관의 장기자금대부 확대, 보증 및 손해담보 창설(17조) -국제협력은행(JBIC)의 용자·보증 확대(3조) -일본기업 진출이 많은 아시아 개도국 지원 (JBIC를 통한 무역금융 원활화·환경투자 지원, JICA를 통한 긴급재정지원 등) -주택·토지금융 원활화 지원(0.7조) 등	41.8
합 계		96.7

**일본은행의 유동성 공급 확대**

- 정부의 금융대책과 더불어 일본은행은 금융위기 이후 2차례 정책금리를 인하하고 공개시장조작을 통해 유동성 공급을 확대
- 일본은행은 2008년 10월 이후 두 차례에 걸쳐 정책금리를 0.5%에서 0.1%로 0.4%포인트를 인하
- 일본은행은 장기국채 매입규모 확대(月 1.2조→1.4조→1.8조 엔), CP 매입, 회사채매입 등을 통해 유동성 공급량 증대를 도모

**정책금융기관 역할 확대와 민영화 연기 논란**

- 일본정부는 경기침체에 따라 정책금융기관의 자금지원 역할을 확대하고, 원래의 민영화계획을 연기할 예정이다.
- 금융시장을 안정화하고 기업의 신용경색을 해소하기 위해 일본 정부가 추진한 경제대책에서 정책투자은행, 국제협력은행 등 정부계 금융기관의 용자·보증 규모가 확대됨.
- 일본정부는 100% 정부출자 금융기관인 정책투자은행의 완전 민영화 시기를 당초의 2013~15년에서 3년간 연기하기로 최근 결정함.
- 일부에서는 정책금융의 용자가 지나치게 확대되면 시장에서 퇴출되어야 할 기업을 연명시키게 되고 결과적으로 일본의 경쟁력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요미우리신문』, 2009.4.17)

- 감세대책과 성장력 강화·저탄소사회 실현: 내수진작을 위한 감세 조치를 도입하고, 저탄소사회 축진의 관점에서 세계의 그린화를 추진(대책 규모는 총 1.3조 엔 정도)

- 중소기업에 대한 경감세율 인하, 접대비 과세 경감을 통해 중소기업 경영 및 자금조달을 지원하고, 주택론 감세를 통해 주택투자를 촉진
- 저공해차 구입, 에너지절약·신에너지 설비투자 등에 대한 세제 지원 등을 통해 성장력 강화 및 저탄소사회 실현 도모
- 내수진작을 위해 고령자의 자산을 활용한 주택취득을 지원하고, 민간의 R&D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관련 세제 정비

표 8. 감세 대책의 주요 내용

(단위: 조 엔)

대책별	주요 내용	사업비
생활대책 (08.10)	(내수진작) -중소기업: 경감세율 한시적 인하, 중소기업 결손금 환급 부활 -주택론 감세의 기한 연장 -해외 자회사 이익의 국내 환원을 위한 세제 조치 (성장동력 강화) -에너지절약·신에너지 투자촉진 세제 도입 (즉시 상각이 가능하도록 한시적 조치)	0.1 정도
생활방어 긴급 대책(08.12)	(내수진작) -주택론 감세수준 인상, 장기우량주택 취득과 에너지절약형 주택 개보수에 대해 감세, 장기보유형 토지취득자에 대해 양도세 특별 공제제도 창설, 토지매매 등록면허세 경감 시한 연장 -중소기업: 경감세율 한시적 인하, 결손금 환급 부활, 주식상속세 납세 유예 -생전증여를 통한 사업승계에 대해 증여세 납세유예, 상장주식 배당·양도차익에 대한 경감세율 연장 등 (성장동력 강화) -환경 성능이 우수한 자동차의 취득·보유에 관한 부담을 한시적으로 감면 -에너지절약·신에너지 관련 설비투자 감세	1.1
경제위기 대책(09.4)	(내수진작) -주택취득을 위한 한시적 증여세 경감 -중소기업 접대비 과세 경감 -연구개발세제 확충	0.1
합 계		1.3

- 지역활성화 대책: 저출산·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지방과 도시간 격차가 확대됨에 따라 지방의 저력이 발휘될 수 있도록 지원
- 고속도로 요금 인하, 지역기업 재생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관광입국 추진, 교통네트워크 정비, 아름답고 활력 있는 지역 만들기 추진 등을 통한 지역 수준의 향상 도모
- 주택·건축물의 지진대비 시설 강화, 이직자 주거안정 확보 등을 추진
- 지방공공단체에 대한 교부금 지원을 통해 지역활성화 도모

■ 경제대책의 특징

- 미국발 금융위기의 여파로 심각한 경제침체에 직면한 일본 정부는 고용불안 및 신용경색 분야에 중점적으로 대응함.
- 특히 최근의 경제위기대책(2009년 4월)에서는 고용창출 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해 2009년 예산 내 공공사업 부문의 상반기 조기집행을 결정함.

표 9. 지역활성화 대책의 주요 내용

(단위: 조 엔)

대책별	주요 내용	사업비
생활대책 (08.10)	-고속도로 요금의 대폭 인하(0.5조) -지역기업 재생, 상점가 활성화, 민간자금을 활용한 공공시설 정비(PFI)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관광입국 추진 -안전한 교통공간 확보 및 물류비용 절감 등에 직결되는 교통네트워크 정비 -아름답고 활력 있는 지역조성 추진 -지역활성화·생활대책임시교부금 지원(0.6조) 등	1.6
생활방어 긴급 대책(08.12)	-생활대책의 내용을 지속 추진	-
경제위기 대책(09.4)	-지역활성화를 위한 투자촉진교부금 등(0.2) -지방공공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지역활성화·공공투자임시교부금 등 2.4)	2.6
합 계		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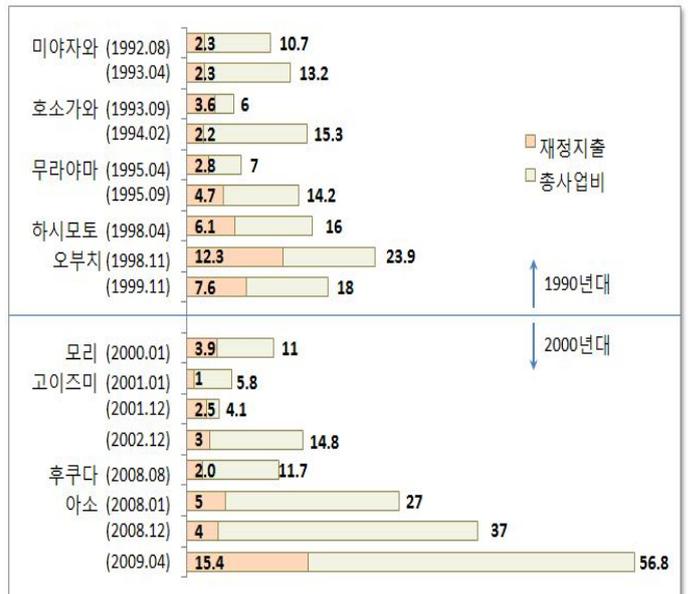
- 기타 대책

- 2조엔 규모의 가계긴급지원금을 지급하여 가계의 소비지출 증대와 서민층의 생활안정 도모(1인당 1만 2,000엔, 65세 이상 및 18세 미만은 2만 엔 지급)
- 경제상황의 급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09년도 예산 안에 1조 엔 규모의 '경제 긴급대응 예비비'를 신설하여 고용, 중소기업금융, 사회자본정비 등에 사용
- 중장기 성장을 위해 '저탄소혁명'을 추진(국비 2.2조 엔 규모)
  - ▶ 태양광을 비롯한 신에너지·에너지절약 기술의 보급을 가속화하기 위해 스쿨 뉴딜 구상(학교의 지진대비 시설 조기 추진, 태양광패널을 이용한 에코 보수 등) 등 추진
  - ▶ 저연비차와 에너지절약 제품 구입 시 보조금 및 에코 포인트 제공(저연비 신차 구입 시 보조금 지급, 그린가젯TV, 에어컨, 냉장고 구입 시 가격의 5% 정도의 에코 포인트 부여)
  - ▶ 운수부문을 중심으로 한 교통·도시·지역의 저탄소화 추진

- 경제대책의 재원은 생활대책(2008년 10월) 및 생활방어 긴급대책(08년 12월)에서는 적자국채를 발행하지 않고 재정투융자특별회계를 활용함. 그러나 최근 경제침체가 지속되면서 경제위기대책(09년 4월)에서는 이에 더하여 건설국채, 적자국채 등의 공채를 발행해 조달하기로 함.
- 한편 2009년 4월 경제대책에서는 2.5조 엔의 공공투자가 책정되면서 고이즈미 정부(2001~06년) 이래 지속되어온 공공투자의 감소(전년도 예산 대비 3% 감액) 경향이 전환점을 맞이함.

그림 9. 1990년대 이후 내각별 경제대책 규모 비교

(단위: 조 엔)



자료: 1990년대 경제대책은 小川一夫竹中平蔵(2001), 2000년대는 내각부에서 인용.

- 경제위기가 지속되면서 세 차례에 걸친 경제대책의 규모(사업비 기준)는 26.9조 엔 → 37조 엔 → 56.8조 엔으로 점차 확대됨.
- 이 중 재정지출의 비중은 10.8~27.1%로 비교적 낮은 편이며, 나머지 대부분은 기업의 신용경색 해소 및 금융·자본시장 안정화를 위한 금융대책임.

- 기업대책 중에는 국제협력은행 및 일본무역보험을 통한 해외 진출기업의 자금조달 지원도 이루어지고 있음.
- 나아가 일본기업의 진출이 많은 아시아 개도국에 대해서도 국제협력은행 및 국제협력기구를 통해 무역금융, 환경투자, 긴급재정 분야에 지원하기로 함.
- 마지막으로 환경·에너지 등의 미래 성장동력 분야에 대한 감세 및 재정지원을 통해 당면한 경제위기에 대응하고 경기 회복 이후의 산업경쟁력 강화를 준비함.
- 이 분야와 관련해 최근의 경제위기대책(09년 4월)은 이전 대책에서의 세제지원에서 나아가 보조금도 지급하기로 결정했는 바, 일본정부가 다양한 정책방안을 모색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3. 평가 및 시사점

#### ■ 평가

- 2008년 하반기 이후 글로벌 경제위기에 따른 일본경제의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아소 정부가 마련한 고용불안 및 신용경색 해소라는 광의의 사회안전망 강화 및 환경에너지 등 미래 성장동력 분야에 대한 지원 중심의 경제대책은 높이 평가할 만함.
- 그러나 2008년 10월과 12월의 대책에도 불구하고 일본경제는 작년 4/4분기와 금년 1/4분기에 전기대비 -3.6% 및 -3.8% 성장이라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함.
- 현재 일본 의회는 여당이 하원(중의원)을, 야당이 상원(참의원)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대책에 관련된 추경예산안과 관련법안의 의회통과가 지연되면서 작년 말 위기 상황에서 이들 대책은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음.
- 예컨대 작년 10월의 '생활대책'에서 내수진작을 위해 준비된 2조 엔 규모의 가계긴급지원금(정액급부금)은 실제로는 금년 3월부터 집행
- 한편 아소 정부가 글로벌 경제위기에 따른 일본경제 침체와 고용정세의 악화에 대응해 경기부양책을 추진함에 따라 고이즈미 정권 이래의 재정건전화 노선이 후퇴함.

- 일본의 재정상황은 선진국 중 최악의 수준(2008년 말 국가채무잔고가 GDP의 170%를 상회)으로, 그동안 재정건전화 노선이 견지되는 가운데 소비세 인상 등 근본적인 세제개혁이 요구되어 왔음.
- 그러나 당면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재정정책이 경기부양 노선으로 전환됨에 따라 과거 고이즈미 정권 이래 수차례 연기되어온 '세제의 근본적 개혁'은 경제회복 이후로 미루어질 것으로 예상
- 다른 한편, 최근 경제침체의 심각성을 반영해 아소 정부는 역대 최대 규모의 경제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나, 이에 따른 경제효과는 정부의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지적됨.
- 경제위기대책(09년 4월)의 경우 총사업비 및 재정투입액은 역대 최대 규모이며, 재정투입액은 GDP 대비 2.7% 수준에 상당함. 일본정부는 이 대책에 따라 2009년도에 1.9%포인트의 GDP성장률 상승효과를 예상

- 그러나 일본경제연구센터, 노무라증권 등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파급효과 추계 모델의 차이 이외에도 GDP증가에 직접적 영향이 없는 금융대책의 제외, 가계소득환경이 악화된 상황에서 구입시 거액이 요구되는 저연비차·에코가전·주택 분야에서의 기대효과 감소 등의 요인에 따라 경기부양 효과가 1%포인트 성장에 그칠 것으로 전망

#### ■ 시사점

- 먼저, 수출급감이라는 대외요인에서 비롯된 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내수기반 강화가 중요한 정책과제임.
- 일본은 경제위기 대응책의 일환으로 환경·에너지 등의 미래 성장동력 분야에 대한 다양한 감세 및 보조금 지원 조치를 통해 당면한 내수기반 강화뿐만 아니라 위기극복 이후 세계시장의 선점을 모색하고 있음.
- 우리나라 역시 녹색성장을 지향하며 이 분야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매우 높은 실정임. 글로벌 경제위기하에서 우리 경제 회복을 위한 내수기반 강화 차원에서도 이들 성장동력 분야에 대한 다양한 정책방안을 발굴할 필요가 있음.
- 또한 내수기반 강화를 위해서는 서비스산업의 육성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바, 이 분야에서도 규제완화를 통해 경쟁력 제고를 유도하고 정책의 추진성과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야 할 것임.

- 둘째, 수출촉진을 위해 다자간 및 양자간 무역자유화의 지속 추진과 정부 유관기관의 국별·지역별 지역연구가 강화될 필요가 있음.
- 자유무역 확대 및 보호무역주의 예방을 위해 WTO, G20 등 다자간 무대에서의 각종 무역자유화 논의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아울러 FTA의 지속 추진을 통해 안정적인 수출시장 및 기술자원의 확보를 도모해야 함.
- 또한 국책기관의 국별·지역별 기초연구 강화 및 지역전문가 양성 확대를 통해 기업의 수출시장 다변화 및 차별화된 마케팅 전략을 지원해야 할 것임. 수출시장 다변화의 궁극적 성공을 위해서는 국별·지역별로 경제·사회·문화적 특성까지 고려한 차별화된 마케팅 전략이 필요함.
- 셋째,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재정지출이 크게 확대되었는바, 재정건전성이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함.
- 일본은 세계 최고 수준의 저출산·고령화 국가로, 사회안정망 강화를 위해 대규모 재정이 필요한 상황이나 과도한 국가채무로 인해 재정운용의 여지가 크지 않음.
- 우리나라는 글로벌 경제위기에 따라 작년 10조 원, 올해 28조 원의 추가경정예산이 편성·지출되어 위기 대응에 기여했으나(금년 1/4분기 전기대비 0.1% 성장), 그 과정에서 GDP 국가채무잔고는 크게 확대된 상황임('06년 27.7% → '09년 38.5%).
- 이번 위기극복 차원의 한시적 지원사업이 더 이상 연장되지 않도록 하고, 또한 세출구조조정, 복지전달체계 개선 등을 통해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KIEP**